

대학총장과의 토론회

< 목 차 >

■ 대학총장과의 토론회 마무리 발언

□ 기회균등할당제

기회균등할당제는 함께 가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
개개인의 경쟁력이 통합돼 국가적 경쟁력 구성
사회적 자본 확충 여부가 국가경쟁력 결정
교육기회 균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략
대학진학률 82%...교육력 향상, 다양화로 보완
대학 간 '기회의 격차'도 해소해나가야

□ 대학 지원과 균형발전

서울집중, 억지정책보다 유인정책 더 중요
지방대학에 불리한 여건 보완 위해 노력할 것
2단계 균형발전사업 등 융통성 있는 지원방안 검토
재정 지원에도 균형발전 관점 도입해야
2008년에 교육 정책 사업비 1조 원 증액

□ 2008년도 대입제도

정부도 융통성 발휘할 것, 대학도 도와주길
대입안은 2004년 당사자 간 합의한 것... 밀어붙이기로 깨면 안돼
대학의 지도적 역할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 버려야
대학자율 중요하지만 공익 위해서는 규제 필요
도덕적 가치 증진이 결국 국가경쟁력으로 귀결
한국은 배려 부족한 사회... 낮은 사회복지지출이 증명
우리 교육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키워야
학생들의 애로 왜 절반이 외고 사례인가
사회적 자본 풍성한 나라 만들기에 대학이 앞서주길

■ 대학총장과의 오찬 모두발언

정권 바뀌어도 교육정책 근간 바뀌지 않을 것
현 정책은 한국사회가 합의한 커다란 흐름
본고사 부활은 안돼... 다양성, 자율성 후퇴 부를 것
정책 바뀌리라는 걱정도, 기대도 하지 말길

■ 대학총장과의 토론회 마무리 발언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완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정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의 기초에 대해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안도감이 생깁니다. 의견이 너무 많이 다른 가운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잘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큰 틀과 방향에 대해 여러분들이 대개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시행 과정에서

큰 착오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는 연구들을 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조언들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 정책의 성과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교의 손에 달린 것이어서 실제 기획된 정책보다 대학교 현장에서 성과가 50%, 100% 더 살아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회균등할당제

기회균등할당제는 함께 가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

개별 문제에 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회균등할당제는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가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도덕적 가치를 얘기하면 별로 인기가 없고 반면 경쟁력 전략을 얘기하면 잘 통하는 세상이어서, 경쟁력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 정책을 한번 평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쟁을 얘기할 때 항상 가장 우수한 사람, 가장 우수한 지도자 집단 또는 사회 지도층 집단의 역량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구성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경쟁력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경쟁력이 통합돼 국가적 경쟁력 구성

그러나 지식이 보편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정보의 공유 수준이 아주 높아져버린 이 사회에서는 이제 엘리트 간의 경쟁만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의 경쟁력과 전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 등이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국가적 경쟁력을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상당한 수준의 첨단 기술들을 갖추고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 현장에서의 생산성이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등은 대학에서 생산되는 엘리트 역량이나 연구소에서 나오는 첨단 기술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른 어느 나라의 국민보다 더 우수한 직업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이라는 경쟁 요소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 여부가 국가경쟁력 결정

아울러 개개인이 아무리 우수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신뢰가 부족하거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현재와 미래의 직업과 생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견과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부족할 때 그것은 그 국가의 통합적 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역량,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그 국가가 통합적으로 가지는 사회적 역량,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고 경영계에서는 얘기하는 그 역량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국가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회 균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략

교육의 기회 균등은 매우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엘리트 계층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전 국민 개개인의 직업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혁신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과, 나아가서 그 사회가 소위 격차와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만과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분열을 통합해 나가는 국가적 장래 전략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회균등할당제는 도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진학률 82%...교육력 향상, 다양화로 보완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지 않은가. 대학 진학률을 깎아 내리는 교육정책은 이론상으로는 세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 사회에서 옳더라도 가능한 것이 있고 아무리 옳아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대학 갈 사람, 안 갈 사람을 나누고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숙련 마이스터 코스를 밟도록 하면, 사회에 총체적인 역량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채택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82%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학교 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82%라도 다 같은 82%가 아니고 각기 길이 다른 82%, 각기 배우는 것도 다르고 거기서 함양되는 역량도 다 다른 82%가 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여러 번 발표하고 오늘 또 다시 확인한 대학 교육력의 향상 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양성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특성화 전략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득이 대학교라는 틀 속에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간 ‘기회의 격차’도 해소해나가야

어느 대학교를 나오면 사회에서 뭔가 면허증을 하나 받은 것 같은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개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출신 학교를 분석해 보면 몇 개 대학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2%에 기회 균등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기회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운영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균등할당제를 다양한 코스와 여러 등급에서 각기 적용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개천에서 때때로 용도 나고, 잉어도 나올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 쪽으로 더 섬세하게 설계해서 걱정하신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학 지원과 균형발전

서울집중, 역지정책보다 유인정책 더 중요

서울집중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서울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은, 모든 정책 위에 있는 최우선 정책이라 할 만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해 신도시

를 짓습니다. 서울 인구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진 정부가,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여러 가치들 사이에서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현재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 한 채 준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쪽방에서라도 기어코 삽니다. 지방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형성될 때 가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억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유인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장 체질에도 맞습니다.

유인정책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학생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것은 좀 막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에 불리한 여건 보완 위해 노력할 것

고등교육 발전 방안에 연구중심 대학, 교육중심 대학, 지역발전 선도대학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기 자기의 특성을 찾아감으로써 고유의 수요자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대학교의 다양한 길이 열려야 합니다. 대학교가 설계해서 그 길을 열고, 수요자가 선택한 과정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일단 지방대학이 불리하니까, 그 불리한 여건을 보완하도록 정부가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지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도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정부는 그렇게 교육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사업 등 융통성 있는 지원방안 검토

재정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몇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매칭펀드라고 말하는 그런 제도도 유연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 창의적인 것은 성과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책에서도 뭔가 창의적인 기술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학과, 또는 교과과정은 아주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과과정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빨리 눈뜬 학생들을 서로 유치하는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간에 새로운 교육,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새로 진입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평가를 못하고 지원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자금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쪽에서도 지역 간 차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 지원에도 균형발전 관점 도입해야

전체적으로 교육 재정지원 과정에서 대통령이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균형발전 관점을 분명하게 도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재정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가 서울과 대덕을 제외하고 나면 27%였습니다. 그것을 올해 40%까지 올려놨습니다. 적어도 이런 관점을 기본적으로 재정

지원에도 넣어서, 지방대학은 지방대학대로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부 연고 중심의 대학이 지방 다섯, 서울 다섯, 한다고 하니깐 그런 지방대학은 서울의 대학과 경쟁하고 서울 대학을 쫓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지방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계속 쫓으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제일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은 대학교 책임입니다. 학생들의 사고를 바꾸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는 길을 한번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범사례를 조금 더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에 교육 정책 사업비 1조 원 증액

2008년에 교육정책 사업비를 1조 원 증액합니다. 2008년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올해 국회에서 통과할 것입니다. 재원의 조달 경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시다만 재원 대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원 발표, 균형발전 재원 발표 등등을 따로 해서는 통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월 중에 경제부총리가 국가재정 배분 계획의 큰 방향을 종합적으로 밝힐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재원조달 방식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총리께 처음 말씀드릴 때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교육 재정 지원은 우리가 주춧돌을 놓고 나가자’ 고 했는데 다행히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아도 조달이 될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 2008년도 대입제도

정부도 융통성 발휘할 것, 대학도 도와주길

핵심쟁점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보고에서 빠져버렸습니다. 2008년도 대입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엇그제 교육부에서 방침을 명료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이 되도록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다소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자존심이 좀 걸려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2008년에는 안 되겠다, 2009년부터 새로 얘기하자’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도 자존심 때문에 입장이 그러면 그건 또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되면 정부로서도 어쩔 도리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도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대학교도 잘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안은 2004년 당사자 간 합의한 것...밀어붙이기로 깨면 안돼

언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도 대입제도는 2004년도에 당사자 간에 모두 합의한 것입니다.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학교, 학부모, 학생 대표가 합의를 한 것이고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입니다. 그 기본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깨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 자체로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의 신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신뢰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요구에 기여해야 합니다. 다른 사회집단과 다른 최고의 지성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와 전략에 대한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앞서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대학의 지도적 역할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 버려야

그것을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지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기 위한 배려가 항상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함께 가려는 어떤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규제를 불쑥불쑥 내밀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독재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의 버릇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결코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규제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자율 중요하지만 공익 위해서는 규제 필요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시는데, 물론 대학자율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학자율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학의 자유도, 대학의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더불어서 자율의 권리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어느 집단만 자유를 누리고, 어느 집단의 자유를 위해서 나머지 집단의 자유가 제한받게 됐을 때, 매우 큰 불편을 겪어야 하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다양성교육, 민주주의교육과 같은 미래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대학의 자율을 주장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덕적 가치 증진이 결국 국가경쟁력으로 귀결

우리 한국사회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귀결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기업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할 수 있지만 대학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육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정책에서 전 국민의 경쟁력, 국민적 통합, 균형 있는 사회, 다양성 있는 사회와 같은 가치를 함께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자본 이론도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눈앞의 비용 얼마를 절감한다고 전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의 신뢰와 안정, 통합이 받쳐 주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우리가 함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배려 부족한 사회... 낮은 사회복지지출이 증명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신뢰가 부족한 사회라는 겁니다. 통합성도 부족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도 아직 부족합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자유와 창의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미래에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OECD에서 한국에 대한 몇 가지를 평가했는데 일부 신문들은 대체로 한국의 성장력에 관한 평가, 부동산정책에 관한 조언, 이런 것만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핵심적인 것은 우리 정부, 우리나라

의 GDP 대비 통합 재정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유럽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2분의 1입니다. 한국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표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언론이 별로 받아쓰질 않았습시다만,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대단히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키워야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강자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너무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강자들입니다. 강자가 강자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강자를 위한 정책이 일방통행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결국 분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분열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부 활력이 넘치는 사회지요.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사회와 선진사회의 현격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초점 없는 눈, 의지할 데 없고 방향도 목표도 없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떠밀려 다니는 우리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것이라고 큰소리 할 수 없습니다.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교육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야 하고, 교육정책 자체에서도 배려가 있는 교육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성사회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애로 왜 절반이 외고 사례인가

주택정책을 얘기 하는데, 모든 주택정책의 기준이 특정 지역입니다. 거기서 오르면 다 오른 것이고 내리면 다 내린 것이고, 거기서 오르면 큰일 나고 내리면 큰일 나고, 올라도 큰일 내려도 큰일인데, 다른 지역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을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육정책에서도 학생들의 애로를 얘기할 때 절반은 외고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고는 설립목적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 아닙니까? 입시학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인데 언론은 그 문제를 해결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풍성한 나라 만들기에 대학이 앞서주길

결국 대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양성되어 나옵니다. 기자도 대학교에서 양성돼 나오고, 정치인도 대학교에서 양성돼 나오고, 또 우리 사회 중요한 모든 엘리트들은 다 대학교에서 양성돼 나옵니다. 아무리 평등사회를 얘기해도, 어느 사회에서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요 직책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완장 찬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권한을 자기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수백 년 동안 아직도 끊임없이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갈등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 엄밀하게 공공의 것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절제된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이 역할까지 하자, 경

쟁력 있는 사람을 키우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자본이 풍성한 나라, 신뢰가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 총장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총장과의 오찬 모두발언

정권 바뀌어도 교육정책 근간 바뀌지 않을 것

시간 때문에 못했던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참여정부에서 정책을 내놔도 정권 바뀌면 다 무산될 것 아니냐는 의문을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절반일 수 있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가 국회 교육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정책이 문민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교육개혁안에 기초해서 그것을 현실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전체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 시절에 마련된 교육개혁안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고, 대강에 있어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가져와서 문민정부가 마련해 놓았던 기초를 뒤엎은 것은 제 생각에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적어도 기본방향에 있어서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조금씩 바꾸는 일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지엽의 문제입니다.

현 정책은 한국사회가 합의한 커다란 흐름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육정책이 근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하던 사람이 장관을 맡기도 하지만, 특히 교육 같은 전문분야에서는 뜬금없이 정치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그 정책을 완전히 다 바꾸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결국 교육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조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아니다’ 싶은 것은 안 굴러가고 어지간한 건 접어놓습니다. 계속 다그치고,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고, 그것만 챙기는 조직을 두고 감사원에 위탁을 해도 한참 있다가 보면 ‘아, 공무원 맘에 안 들어서 그냥 잠재워버린 정책이구나’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교육정책 영역에서 제가 크게 부닥친 것은 없지만, 공직사회의 관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점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고, 나쁜 점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개 오늘 발표하고 토론한 정책은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기본적으로 타당성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본고사 부활은 안돼…다양성, 자율성 후퇴 부를 것

쟁점화 되어 있는 것은 본고사 제도 정도입니다. 만일 본고사 중심으로 입시제도가 바뀌어 버리면 사실상 등급제가 부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논쟁도,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중등교육 전체 흐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중학교까지 유지되고 있는 개방성, 다양성, 자율성 같은 것이 입시 위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문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정책 바뀌리라는 걱정도, 기대도 하지 말길

후보 때는 저도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시장경제 사회에서 영업의 비밀이란 것도 하나의 경제력인데 아파트 원가 공개하는 게 맞겠냐?’ 한마디 했다가 결국 물러섰지 않습니까? 못 이겨서 물러섰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권 바뀌어도 정책이 크게 바뀌리라는 걱정도 하지 마시고, 또 바뀌리라는 기대도 크게 않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